

2019년 07-08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50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auri)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년 07·08월(Vol.50)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김영현, 문보람, 이화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619
이메일	yhkim@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19년 07·08(Vol.50)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 건축·도시 법·제도 동향

7 건축·도시 계획추진 동향

13 건축·도시 사업추진 동향

21 건축·도시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7·8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조성 추진

주택건설공급과, 2019.07.04.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국토부, 다가구·오피스텔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녹색건축과, 2019.07.29.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5년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입한 셉테드 기준을 앞으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정책과, 2019.08.12.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를 통해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광주시, 다양성·안전성 담보하는 새로운 주택정책 추진

도시계획과, 2019.07.08.



광주시는 다양성과 차별성, 안전성을 담보하는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설계 지침인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보행공간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에 상가를 배치하는 연도형 건축계획 반영, 단지 인근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된 공공보행로 확보, 단지 내 동 배치의 다양화, 공동주택 층벽 및 돌출형 발코니 등을 통한 차별화를 반영한다. 또한,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아파트는 1082단지 40만3000여세대에 달한다. 이 중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단지는 25만1000여세대로 약 62%에 해당된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를 비롯해 향후 건립될 아파트 현황까지 관리하는 주택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향후 개발 예정인 주택사업 현황까지 관리하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 주택법에 의한 종상향 제한

도시계획과, 2019.07.16.



광주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고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에 의한 종상향*을 제한하기로 했다. 종상향이 수반되는 주택사업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는 도시계획절차인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선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시와 부산에서만 허용하던 종상향 의제처리에 대해 앞으로는 기존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주택사업을 허용하고, 불가피하게 종상향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한 뒤에 조합원 모집 등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 종상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함

부산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법무담당관, 2019.07.1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연말 개정된다. 201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번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등 역차별이 있었다. 법령이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되어 매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제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건축지적과, 2019.07.22.



제주도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가 3개월 후 시행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3개 분야로 구분하며, 환경성능 및 관리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 받도록 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되어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톤CO₂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광주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

도시정비과, 2019.07.29.



광주광역시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초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시행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저가주택 재고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관리 및 자금조달 등을 통해 기존 재개발사업의 원주민 내몰림, 조합운영 비리, 사업기간 장기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상업지역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제동

건축주택과, 2019.08.23

진행

건축
정책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21일 제6회 지방건축위원회를 열고 광산구 쌍암동 654-1번지 일원의 주상복합 건축계획을 심의해 39층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조건부 의결했다. 그동안 나홀로 아파트·주거단지 개발이 기존 도심지 경관체계와 어울리지 않고 일조, 통풍, 교통문제를 유발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7기 들어 상업지역 내 가로구역 높이 지정을 통한 건축물 높이제한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용적제*를 개선해 상업지역내 고밀도 건축물을 제한하고 본래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계획을 유도해왔다. 시는 고층 건축물의 제한과 더불어 획일적인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공동주택 심의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순환적 재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해나갈 계획이다.

* 용도용적제 :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

국토부, 의왕 청계 등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

공공주택추진단, 2019.07.01.



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이들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1년 초부터 착공돼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만 가구 주택공급 2차 계획에 따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8개 지구는 연내 지정이 완료되면 내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1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안전개선과, 2019.07.10.



최근 3년 동안 사고이력 노상주차장은 3개월 이내에, 이외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가 2년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 이번 발표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역 내 학교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폐지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019.07.24.



국토
정책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한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km²)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km²)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성별로는 핵심 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 광주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과, 2019.07.08.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가 7월 10일 개최되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토 환경, 삶의 질,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 주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겨질 예정이다. 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새로운 비전으로 포용적인 국토, 활력 있는 국토, 품격 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 등 4대 목표를 제시한다. 광주시의 지역계획안은 '문화와 첨단이 어우러진 포용도시, 광주다운 도시'이라는 비전으로 문화적 포용, 지역적 포용, 일자리 포용 등 3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도시균형계획과, 2019.07.12.



인천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착수보고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전문가가 주도했던 행정적 계획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도시공간구조를 도심·부도심·지역 중심에 이어 지구중심을 추가하여 주민의 삶과 더욱 밀접한 ‘주민생활 권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자문회의, 군구 설명회,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0년 말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 발굴·지원·재생 종합계획

한옥건축자산과, 2019.07.29.



서울시가 한옥 등 '근·현대 건축자산' 발굴·지원·재생하는 첫 종합계획인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발굴·관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 계획으로, '22년까지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존을 위한 규제보다는 적극적 활용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내년 6월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을 확대하고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또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건축특례 적용 가능 대상을 늘리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옵션을 제공한다.

부산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안)」 마련

도시정비과, 2019.07.24.

진행

도시
정책

부산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로는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의 전면철거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해안가 인접거리 등 개발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 상업지는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하구 시범생활권 운영상 문제점인 대규모 부정형 정비구역 지정신청 쇄도와 관련 정비계획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구역 정형화 등 정비계획수립 적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에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bottom up) 정비구역 지정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부산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그간 부산시에서 진행되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선7기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수립 공청회 개최

균현발전과, 2019.08.06.



경상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9일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도출된 ‘종합계획 변경안’을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용역변경은 남해안권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종합 분석해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 변경안이 반영 되면, 경남도 내에 총 5조 9,144억 원의 재원이 투입돼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창원·진주·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신산업연구과, 2019.08.07.



경남 창원, 진주,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지난 6월 19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고시문에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특구지정 목적, 구역 위치·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 구역 안 토지의 지면·지목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강소특구 지정 전산파일을 배포하였으며 강소특구 지정 주요내용과 토지의 지목·지면현황 및 지형도면을 관련부서에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2040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도시계획과, 2019.08.21.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서울플랜)」(이하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14년 확정된 ‘2040 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대체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2040 서울플랜’은 시민의 ‘참여’를 넘어 ‘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본 계획은 [1단계] 미래상 계획과제 도출, [2단계] 전략 부문별 계획 수립, [3단계] 공간 토지이용 계획 수립, [4단계] 공론화 등 법정절차 및 확정공고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되며, 1단계에서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2040 서울플랜’은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 하에 2040년 한 단계 더 나은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2030 연천군기본계획 수립, 통일중심도시 추진

도시주택과, 2019.08.28.



경기도는 8월 28일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은 연천군에서 수립한 장기적 도시발전 로드맵으로, 기존계획보다 인구목표를 1,000명 감소한 현실성 있는 계획이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연천)에서 2도심(연천, 전곡)으로 보완 설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 여건을 마련했으며, 간선도로망 수준 분석을 통해 종합적 교통계획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2030년까지 1인당 공원면적을 12.0m²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의 승인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연천군(도시주택과)에서는 승인된 계획을 9월 중 공람할 예정이다.

국토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 지원

지역정책과, 2019.07.03.



국토교통부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곳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각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개발사업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 23곳에 국비 45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낙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역의 자연 문화자산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업들이 많았다. 아울러 ‘고령 친화형 사업’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정비 등의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및 5000억원 펀드 조성

도시경제과, 2019.07.08.



국토교통부는 8일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을 위해 펀드를 통해 약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체계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시티는 신기술을 적용해 각종 문제를 해결한 도시를 말하며,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중소기업 대상 우대 금융조건 등을 지원하며, ‘코리아 스마트시티 오픈 네트워크(K-SCON)’를 구축하여 2020년 1차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수주지원협의회 산하 스마트시티 분과를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 노후도시 재생에도 '스마트시티' 적용

도시경제과, 2019.07.15.

진행

도시
정책

노후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25개 이상 지역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고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25곳 이상의 노후도시에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인프라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와 시범도시 연계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종합계획은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추진

건축주택과, 2019.07.01.

진행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본 사업은 최근 1년('18. 7. ~ '19. 6.)동안의 공동주택단지 관리 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로 5개 분야를 평가한 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 및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각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서 진행되며 9월 중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부산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도시재생정책과, 2019.07.03.



부산시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2019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에는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참여하여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은 지난 2014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3억 원을 투입하여 60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충남도, 산림문화 자산 발굴 통해 관광자원화 추진

산림자원과, 2019.07.03.



충남도는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숲 3곳을 발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산림청에 신청했다. 도가 자산 지정을 신청한 숲은 아산 아름다운 가로수길, 서천 소나무 해안 방풍림, 홍성 소나무와 정금나무 군락지 등이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산림교육, 등산로 활성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림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결정

철도과, 2019.07.08.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조사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본 사업은 인천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광명 노온사동을 시작으로 신천, 서창2지구, 도림사거리, 인천논현, 신연수, 청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8.5km의 대규모 광역철도가 건설된다. 특히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사이에 ‘수인선 청학역 신설’도 반영되었다. 인천시는 “교통 복지 향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국비 20억 추가 확보

도시재생과, 2019.07.11.



국토
정책



강원도는 7. 10.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상반기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조기 집행 ‘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성과급으로 20억 원의 국비를 추가 배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10억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추가로 국비를 배정하였다. 강원도는 올해 광역 선정분 4곳을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미 상반기에 1곳(춘천 교동 지구)을 선정한 바 있고 하반기(9월 말)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700억원을 확보

도시재생정책과, 2019.07.11.



광주광역시시는 지난해 7월 광주역 경제기반형, 전남대 주변 대학타운형, 동구 동명동 등 주거지 지원형 등 3곳을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70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사업 150억원과 새뜰마을 및 소규모사업 5곳에 68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그 중 전남대 주변 대학타운형 사업은 전남대 정문과 북구청 사이 주택지역 23만m2와 전남대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간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대학자원을 이용한 상생발전 모델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중심시가지형 사업인 백운광장 주변은 도심공동화와 상권쇠퇴가 심각하게 진행된 곳으로, 올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도 중앙 및 광역 선정 대상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발굴해 국비 400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도시외곽 위주의 개발로 소외됐던 원도심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과, 2019.07.11.



서울시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18.12.26.일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사업에 공공주택 22세대와 문화시설이 함께 복합개발 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은 물론 도심부에 공공주택을 더욱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민간건물 연결통로 추가 설치로 서울로 7017 보행 활성화

도시활성화과, 2019.07.18.



도시
정책

서울시는 7월 16일 (주)안다자산운용과 ‘서울로 7017-메트로타워 간 연결통로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주체인 건물주와 협력하여 서울로7017과 메트로타워 간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도심 곳곳을 보행로로 연결하고 서울역 일대와 ‘서울로 7017’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결통로가 설치되면 서울로 7017 부터 메트로타워 외부공간을 통해 남산방향으로 보행 연결이 가능하며,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격 추진

도시정책과, 2019.07.29.



도시
정책



문화
관광

광주광역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동구 동계마을과 남구 덕남마을, 북구 어운마을 등 3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환경 개선 ②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함께 ③ 문화복지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의 생활인프라가 확충되고, 노후화된 건축물,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 본격화

경제정책과, 2019.08.15.



세종특별자치시가 5-1생활권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총 54억 5,0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세부 사업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육성 기반 조성 사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시범 사업’ 등 2개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세종 스마트 시티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횡단보도 추진

교통과, 2019.08.22.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인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스마트 LED 바닥경광등, 운전자 감속유도장치, 말하는 스마트횡단보도 알림이, 스몸비(스마트폰+좀비) 깨우기 등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안전’과 관련한 지역 문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해결하는 ‘시민주권’ 참여 프로젝트로, 기획·설계·평가·분석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 첨단기술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갈 계획이다.

서울시, 신림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99호 내년 1월 착공 예정

주택공급과, 2019.08.29.



건축
정책



서울시는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관악구에 처음으로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공급하는 본 사업은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29일 고시하였다. 사업계획이 결정된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299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022년까지 데이터센터(IDC) 구축 추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19.07.09.

진행

도시
정책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건설본부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지상 3층, 연면적 3,60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안」을 확정했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경기도청 전산실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방식은 가상화를 통해 정보자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각종 데이터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최근 정보화사업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는 더 높은 품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 도시관리 업무로 활용

건축과, 2019.07.10.

진행

도시
정책

세종특별자치시가 매년 시 전역에 대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해 도시공간 계획, 산림 및 에너지 관리 등 도시관리 업무에 활용한다. 시는 최근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용역을 통해 앞으로 ① 급변하는 세종의 변천 과정을 기록 ②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기틀 마련 ③ 지하구조물, 기반시설 등을 통합한 행정 인프라 구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항공-가상현실 웹서비스 개시

도시건축과, 2019.07.22.



도시
정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7월 촬영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전 지역의 항공-가상현실(VR)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자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구축해 시민들에게 웹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발전상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상시정보 열람 간편화

도시정책과, 2019.08.20.



도시
정책

대전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구단위계획구역명을 담아 추가문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정보는 대전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역명을 입력하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도면 등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경남도, 통합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정책과, 2019.08.21.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스마트(Smart)하게 탈바꿈시킨다.

경남도가 2020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어촌 10개 군지역 통합 광역BIS구축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벽지교통 브라보 택시의 이용 편리성 향상, 교통약자를 배려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확대이다. 본 사업들을 통해 스마트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소외된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ro, Sejong-si, 30103, Korea

